

커뮤니티 비즈니스 중장기 육성방안(1/3차연도)

지역 간 · 계층 간 격차실태와 요인분석

김 경 덕 연구위원
임 지 은 연구원

연구 담당

김 경 덕 연구위원
임 지 은 연구원

연구총괄, 분석 및 집필
자료정리 및 분석

머 리 말

글로벌화의 진행과 함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지역 및 계층 간 부의 격차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 도농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농촌내부에서도 지역 간, 계층 간 격차 또한 심각하다. 농촌지역 내에서도 중심부인 읍부로의 인구이동과 면지역 주변부의 공동화 현상, 농업내부의 농업소득양극화 현상의 심화는 동질성을 가정한 농촌지역의 상정은 유의미하지 않고, 이질성과 차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유형별 접근을 요구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간·지역 내 발전격차 실태와 그 원인 분석 없이 지역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정책실패를 초래하기 십상이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발전격차 실태를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농촌지역활성화 정책은 지역의 여건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특히 지역의 부존자원과 특성을 고려한, 지역차원의 이윤과 효용수준을 극대화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의 경우 지역실태분석에 기반을 둔 정책수립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 간·계층 간 격차실태와 그 확대요인을 동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초조건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크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지역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2011.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요 약

글로벌화의 진행과 함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지역 및 계층 간 부의 격차를 확대시켰다. 우리나라는 도농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농촌내부에서도 계층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지역 간·지역 내 발전격차 실태와 그 원인 분석 없이 지역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정책실패를 초래한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역의 발전격차 실태를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에 지역 간·계층 간 격차실태와 그 확대요인을 동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역유형별 농촌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초조건을 분석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고,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중장기 육성전략의 세부과제로 추진되었다.

지역 간 소득격차는 1995~2008년의 13개년 동안 일인당 지역총생산이 높은 지역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등 지역별로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경제성장 속도가 더 높게 형성되었다. 시간에 따라 지역 간 경제성장률의 격차는 더 벌어지는 양이나 유의하게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성장 절대수렴 가설인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s)가 부정됨).

지역 간 소득 수렴·발산여부는 σ 수렴 검정과 절대수렴 검정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간 성장이 수렴과 발산의 특징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을 비슷한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건부 수렴여부를 검정하였다. 이를 위해 (1) 경기지역과 경기 외 지역을 비교 분석, (2) 경기지역, 경남지역, 나머지 지역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기지역의 시군은 수도권 지역이라는 동질성으로 인해 지역 간 경제성장률이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이외의 지역은 지역 간 경제성장률이 수렴한다는 것을 유의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지역 간 동질성이 담보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상대수렴 가설 성립).

지역소득격차 결정요인분석으로는 인적자본 가설이 성립되었다(RDI 격차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GRDP의 성장률은 지역의 초기조건인 일인당 GRDP와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중에 의하여 유의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적자본이 높은 지역일수록 그 지역의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고, 지역유효인력(effective labor forces)에 따른 지역간 인적자본의 쏠림이동을 의미한다.

시군 지역 내의 읍면별 경지규모, 농축산물 판매금액, 연령별농가인구 등을 살펴보면 지역의 중심인 읍부와 주변부인 면부와의 격차가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대상 지역은 지역인구가 감소하고, 광공업체 수도 감소하는 IV유형, 즉 시장에서 경제성장의 낙수효과를 얻기 어려운 지역을 중점지역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한편 인구는 비록 감소하나 도소매업체 수는 증가하는 III유형의 경우 시장에서 소규모 사업체가 자생적으로 영위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지역인구감소 방지 및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안정적 근착이라는 의미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중점 대상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ABSTRACT

Regional and Class Divide: Causes and Facts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facts and causes of regional and class divides in the rural areas. The income divide between the regions has been increasing since the early 1980s. The regional divide was estimated in terms of variation of GRDP. The estimation results tell us that more favored regions experienced more rapid growth and it is almost impossible to insist on the trickle-down effects of investing resources on more favorable regions and sectors.

Regions could be classified according to variations of GRDP, population and economic activities. All of regional economic promotion policy programs should be adjusted to their stereotypes. For the community business project, it is recommended to preferentially take care of regions which have less population and less economic activities.

Researchers: Kyeong-Duk Kim, Ji-Eun Lim

Research Period: 2011. 1 ~ 2011. 10.

E-mail Address: kdkim@krei.re.kr, jelim@krei.re.kr

차 례

제1장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2. 연구범위 및 방법 3
- 3. 연구내용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제2장 지역 간 소득격차

- 1. 지역 소득 현황 7
- 2. 지역 간 경제력 수렴 여부 11
- 3. 농업부문 격차 20

제3장 지역격차 지수

- 1. 지역격차지수 개발 23
- 2. 지역발전지수 분석 27
- 3. 지역발전지수 사례지역분석 30

제4장 지역유형과 격차

- 1. 지역유형구분 35
- 2. 지역유형 분석 37
- 3. 읍면별 격차분석 44

제5장 요약 및 결론 47

부록 1. 경지규모별 농가 수와 연령별 농가인구 49

참고문헌 53

표 차례

제2장

표 2-1. 일인당 지역내총생산 현황	8
표 2-2. 구간별 추정결과	10
표 2-3. 1998~2008년 절대수렴	14
표 2-4. 1998~2008년 절대수렴: 경기지역	15
표 2-5. 1998~2008년 절대수렴: 경기 이외지역	16
표 2-6. 1998~2008년 절대수렴: 경남지역	17
표 2-7. 1998~2008년 절대수렴: 경기 및 경남 외 지역	17
표 2-8. 1998~2008년 조건부수렴: 인적가설	18
표 2-9. 경지규모별 농가 수(전국)	21
표 2-10. 농축산 판매금액별 농가 수(전국)	22

제3장

표 3-1. 지역발전지수와 그 변화율	27
표 3-2. 지역발전지수 요소별 변화율	29
표 3-3. 6개 지역비교: 지역발전지수(1)	32
표 3-4. 6개 지역비교: 지역발전지수(2)	33

제4장

표 4-1. 인구와 광공업체 수 기준 유형분류(2000~2005년)	40
표 4-2. 인구와 광공업체 수 기준 유형분류(2005~2009년)	41
표 4-3. 인구와 도소매업체 수 기준 유형분류(2000~2005년)	42
표 4-4. 인구와 도소매업체 수 기준 유형분류(2005~2009년)	43

부 록

부표 1. 경지규모별 농가 수	49
부표 2. 연령별 농가인구	50

그림 차례

제2장

- 그림 2-1. 일인당 GRDP와 GRDP 성장률 9
- 그림 2-2. 1인당 시군 GRDP의 표준편차 13

제3장

- 그림 3-2. 시기별 RDI 분포 28
- 그림 3-3. RDI 요소별 변화 30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글로벌화의 진행과 함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지역 및 계층 간 부의 격차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 은행의 도산으로 촉발된 미국의 금융시스템 붕괴와 이로 인한 세계경제의 위기는 지난 1980년대부터 30년간 세계경제질서를 제패하였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에 입각한 영·미식 시장경제체제의 한계를 웅변적으로 보이고 있다.¹

정부와 공공부문은 가급적 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자원배분과 경제활동을 시장의 자율에 맡김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효과적인 경제성장이 담보되고,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저소득층의 소득 또한 증대하리라는 경제성장의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s)’에 대한 신념은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과 부와 소득의 양극화로 대변되는 중산층의 몰락에 그 빛은 바래지고 현실적 수명을 다하고 있다.² 1970년대 중반 이후 실업과 물가상승, 저성장 등에 직면한 스태그플레이션, 과도한 정부 및 공공부문의 시장개입 등 국민경제에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함께 민간부문을 위

¹ Rajan(2010) 참조

² Krugman(2007)

2 연구의 개요

축하는 ‘밀어내기 효과(crowding-out effects)’에 대한 반성으로 태동한 신자유주의는 계층 간·지역 간 불평등 악화와 중산층의 몰락을 수반함으로써 그 시대적 소명을 다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또한 저소득층에 일자리 제공, 건강의료보험 및 무상급식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둘러싼 보편적 복지 논쟁 등 계층 간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화두에 답하는 과정에서 계층 간·지역 간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도농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농촌 내부에서도 지역 간, 계층 간 격차 또한 심각하다. 농촌지역 내에서도 중심부인 읍부로의 인구이동과 면지역 주변부의 공동화 현상, 농업 내부의 농업소득양극화 현상의 심화는 동질성을 가정한 농촌지역의 상정은 유의미하지 않고, 이질성과 차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유형별 접근을 요구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간·지역 내 발전격차 실태와 그 원인 분석 없이 지역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정책실패를 초래하기 십상이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발전격차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농촌지역활성화 정책은 지역의 여건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시·군 단위에서 지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의 실태와 동태적 변화과정, 지역인구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 지역여건의 변화를 고려한 지역 유형구분에 바탕을 둔 유기적 지역정책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특히 지역의 부존자원과 특성을 고려한, 지역차원의 이윤과 효용수준을 극대화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의 경우 지역실태분석에 기반을 둔 정책수립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 간·계층 간 격차실태와 그 확대요인을 동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역유형별 농촌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초조건을 분석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내총소득, 인구 및 사업체 수 변화, 지역유형구분, (시·군)지역 내의 중심지와 주변부의 변화, 농업 내부의 양극화 등의 실태분석이 수반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2.1. 연구범위 및 대상

지역 간·계층 간 격차와 요인 분석은 경제적 측면, 인구측면, 사회문화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광역시와 제주를 제외한 156개 시·군 단위 지역의 2차 자료를 중심으로 지역내총소득(GRDP), 인구 및 광공업체 수 등 지역 거시자료를 이용한다. 한편 유의적으로 선택된 사례지역의 경우 읍면 수준에서의 분석을 통해 지역 내에서의 격차실태를 분석한다.

2.2. 연구방법

GRDP 성장률 격차분석과 수렴여부는 회귀분석을 이용한다. 지역유형구분은 GRDP, 인구변화, 광공업체 수 변화 등 통계분석을 이용한다. 지역 격차실태와 그 요인 파악을 위해서는 지수분석(index analysis)을 한다. 지수분석은 (1) 경제적 측면, (2) 지식 및 인적자본 측면, (3) 삶의 질 측면 등 세 가지 측면을 아우르는 지수개발과 시·군 단위에서 분석이 이루어진

4 연구의 개요

다. 읍면 수준의 분석은 유형구분에 의한 유의적 사례분석에 그친다.

3. 연구내용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이동필 외 6인(2004)은 도농 간 소득 및 발전격차 실태와 원인분석에서 지역격차를 (1) 소득, (2) 인구 및 생활환경, (3) 상공업 부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소득격차를 도시근로자구와 농가의 소득 수준 비교에 한정하고 있는 부문분석(sector analysis)에 그치고 있는 바, 지역의 개념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계열상 지역 간 소득격차 문제를 분석하는 데 미흡하다.

김경덕(2004)은 농촌·농가인구 및 농업노동력의 중장기 전망과 정책과제에서 농촌지역 인구 및 농가인구실태와 전망, 인구 및 농업노동력 이농요인, 유형별 지역인구-농가인구-농가호수 변화 분석을 통해 인구 및 노동력차원에서 지역 간의 격차를 분석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 소득수렴여부는 권오상·강혜정(2008)은 1998~2002년 5개년, 2003~2006년의 4개년의 농가경제조사원자료를 이용해 농가가구당 농업소득, 농외소득, 농가소득의 수렴여부와 그 요인을 분석하면서 농가당 소득이 수렴하는 것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시·군 단위에서의 소득격차 실태와 그 원인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송미령 외(2011)는 지역발전지수를 이용하여 시군별 발전을 비교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발전지수의 구성요소가 시계열상 비교 가능하도록 구성되지 못함으로써 시·군 간 발전격차의 시계열 변화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는 연구의 범위가 시도단위, 또는 농촌/도시, 농업/비농업의 부문별 분석에 그침으로써 시·군단위의 지역개념과 지역노동시

장구조분석에 입각한 지역노동시장 실태분석과 정책과제 도출에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간 소득 및 인구격차의 시계열적 분석을 통한 격차의 통태적 요인을 파악하고, 지역유형별 해소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존 연구와 차별을 두었다. 특히, 읍면별 사례분석을 통해 격차가 완화되는 지역과 발산하는 지역의 유형별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데 기존 연구와 차별이 있다.

3.2. 연구내용

연구의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서장에 해당되는 연구개요에 이어 제 2장에서 지역 간 소득 차이와 그 동태적 변화과정이 분석된다. 지역소득 실태는 통계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되는 지역내총생산 자료를 이용하여 제표분석과 회귀분석을 겸한다. 이를 통해 시간에 따라 상이한 지역의 총생산액이 수렴하여 궁극적으로 생산요소 투입을 통해 낙후지역이 선진지역을 따라잡을 수 있는지(catch-up) 지역 간의 경제력 수렴여부가 검토된다.

제 3장에서는 지역 간 격차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격차지수가 개발된다. 지역격차지수는 지역 간 상대적 위상뿐만 아니라 전년 대비 절대적 변화까지 분석한다. 제 4장에서는 지역의 유형을 구분한다. 지역내총생산뿐만 아니라 인구 수 변화, 광공업 및 도소매업체 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역유형을 4가지로 구분한다. 각 유형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읍면 차원에서 유의적으로 선택된 사례지역의 지역 내/계층 간 격차와 그 요인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하였다.

지역 간 소득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시·군 단위 지역내총생산 (GRDP) 현황을 분석한다. 그 다음으로 지역 간 소득의 수렴 및 발산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지역내총생산의 동태적 분석이 이루어진다.

1. 지역 소득 현황

광역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군별 일인당 지역총생산(GRDP)은 다음 <표 2-1>과 같이 정리된다. 분석 대상 시군지역의 2005년도 불변가격으로 2000년도의 일인당 연평균 GRDP는 1,448만원, 2005년 1,776만원, 2008년 1,932만원으로 2000~2008년 동안 연평균 4.2% 성장하였다.³

일인당 GRDP 최대지역은 2000년 3,796만원에서 2008년 7,358만원으로 연평균 11.7% 성장한 반면 최소지역은 2000년 738만원에서 2008년 850만원으로 연평균 1.9% 성장에 머물고 있다. 고소득지역의 소득증가가 저소득지역보다 6배 이상 빨리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도에 따라 분산 값이 증가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³ 우리나라 전국 1인당 국민총소득(GDP)은 2005년 불변가격으로 2000년 1,471만원에서 2008년 2,029만원으로 연평균 4.7% 성장하였다.

표 2-1. 일인당 지역내총생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05년 불변가격)

연도 구분	2000	2005	2008	연평균 변화율(%)		
				2000~05	2005~08	2000~08
최대값	37.96	60.98	73.58	12.1	6.9	11.7
최소값	7.38	8.26	8.50	2.4	1.0	1.9
평균값	14.48	17.76	19.32	4.5	2.9	4.2
분산	23.57	75.16	98.93	43.8	10.5	40.0

한편 2000~2005년의 일인당 GRDP의 최댓값은 연평균 12.1% 성장하였으나 2005~2008년은 6.9% 성장함으로써 최고소득 시·군 지역의 성장률이 둔화되어 시·군간 소득격차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동기간 동안 최솟값의 성장률 또한 2.4%, 1.0%로 감소함으로써 지역 간 소득격차 축소 또는 확대 여부를 판단하기 모호하다. 이는 연도에 따라 시·군 지역 간 일인당 GRDP의 분산 값은 증가하나 그 증가율은 감소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시·군 간 지역총생산 격차의 확대 또는 축소여부가 비교초기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군 지역의 지역총생산의 수렴 또는 발산여부는 비교시점을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1995~2008년의 13개년 동안 지역 간 소득격차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1995년도와 2008년의 시·군별 GRDP와 일인당 GRDP 자료를 비교 분석한다. 시군단위 지역의 소득자료가 불충분하고, 비교연도의 초기조건에 의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비교시점을 2008년, 1995년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2008년도를 비교시점으로 하여 1995~2008년 13개년 동안의 시군단위에서 시군별 경제성장률과 2008년도 시군별 일인당 GRDP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우리의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ln(GRDP_{i,2008}/GRDP_{i,1995}) = a_0 + a_1 \ln(PGRDP_{i,2008}) + \epsilon_i \quad (1)$$

여기서 i 는 시·군을 , **GRDP**는 일인당 지역총생산을 나타낸다. $a_1 > 0$ 이면 2008년도의 일인당 지역총생산이 큰 지역은 1995~2008년의 지역총생산의 성장률이 높은 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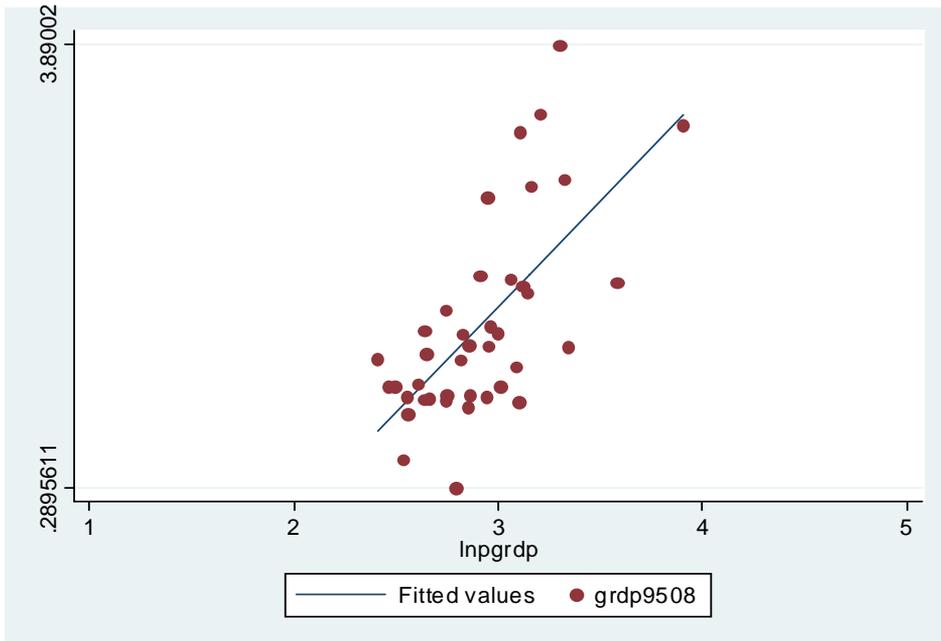
$$\ln(\text{GRDP}_{i,2008}/\text{GRDP}_{i,1995}) \approx -3,388155 + 1.715648\ln(\text{GRDP}_{i,2008})$$

(-3.70) (5.49)

()은 t 값

추정결과 $a_1 = 1.7156$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어 2008년도 일인당 **GRDP**가 높은 지역일수록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더 빠르게 1995~2008년 동안 성장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성장률과 지역총생산이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일인당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경제성장 속도가 더 높게 형성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림 2-1. 일인당 GRDP와 GRDP 성장률



10 지역 간 소득격차

한편, 시간에 따른 소득격차의 심화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추정구간을 1995~2000년, 2000~2005년, 2005~2008년의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위의 수식 (1)을 추정하는 소위 구간별 지역 간 소득격차 여부를 검정하였다. 각각의 추정식과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1995-2000\text{년 추정식} : \ln(GRDP_{i,2000}/GRDP_{i,1995}) = a_0 + a_1 \ln(PGRDP_{i,2000}) + \epsilon_i$$

$$2000-2005\text{년 추정식} : \ln(GRDP_{i,2005}/GRDP_{i,2000}) = b_0 + b_1 \ln(PGRDP_{i,2005}) + \epsilon_i$$

$$2005-2008\text{년 추정식} : \ln(GRDP_{i,2008}/GRDP_{i,2005}) = c_0 + c_1 \ln(PGRDP_{i,2008}) + \epsilon_i$$

표 2-2. 구간별 추정결과

추정기간	a_0	a_1	R^2
1995~2000	-1.445396 (-2.77)	0.8976334 (4.17)	0.3138
2000~05	-0.2249439 (-1.35)	0.2321874 (3.95)	0.1203
2005~08	-0.5436053 (-3.26)	0.2411539 (4.25)	0.1543

구간별 추정결과 시간에 따라 지역 간 경제성장률의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것은 않으나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의 절대수렴 가설인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s), 즉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명분하에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성장이 촉발된 지역이 그렇지 못한 지역에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다는 불균형 성장이론의 논리적 근거가 타당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대 중반의 지역 간 경제성장률 차이는 지역의 소득격차를 확대시켰다. 이는 19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의 소득격차는 발산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0년대 초반의 지역 간 경제성장률 격차는 지역격차의 요인으로 유의

하게 추정되었으나 1990년대 중반보다는 발산 정도가 약화되었다. 이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갖게 된 일시적 조정기간이라 할 수 있다. 즉, 외환위기 때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순인구 유입이 발생하는 등 도시부 경제의 마이너스 파급효과가 농촌부보다 더 컸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지역경제성장률은 초기조건에 대하여 양의 반응을 하는 것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고 2000년대 초반보다 발산 정도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⁴ 외환위기의 일시적 조정기간 후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사조가 반영된 것이라 판단된다. 즉,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의 도입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지역 간 경제성장이 수렴하지 않고 일정 부분 발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산의 정도는 IMF 외환위기 이후 약화되었지만,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이는 신자유주의 논거의 근간인 경제성장과실의 낙수효과가 작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지역 간 경제력 수렴 여부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시·군별 지역경제는 발산하는 경향과 함께, 초기조건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절에서는 지역경제수렴여부를 분석한다. 지역경제성장의 수렴여부는 크게 σ 수렴과 β 수렴 두 가지로 구분된다. σ 수렴 검정은 지역의 동질성과 무관하게 특정시가의 지역소득 분산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의 발산여부를 측정하는 통계적 방법이다. β 수렴 검정은 상대적으로 동질지역 일수록 경제력이 수렴하는 현상을 보인다는 것에 착안하여 일인당 GRDP

⁴ 2000년대 중반의 추정치는 0.2411539로 2000년대 초반의 추정치 0.2321874보다 비록 차이는 미미하지만 더 큰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12 지역 간 소득격차

수준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른 측면의 조건을 동시에 고려하여 동질의 초기 조건을 경제력 격차의 설명요인으로 상정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검정하는 방법이다.⁵

2.1. σ 수렴

σ 수렴 검정 방법은 지역 간 동질성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의 지역소득 불평등지수나 표준편차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기존의 국내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⁶ 즉, 지역의 초기조건 및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동질성과는 무관하게 특정시기의 지역 소득 분산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의 발산여부를 측정하는 방법을 σ 수렴 검정이라 정의한다.⁷

1995~2008년 간 우리나라의 시·군 단위 GRDP의 표준편차를 시계열로 나열하면 그림 <2-2>와 같이 발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8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일인당 시군 GRDP의 표준편차는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일정범위 내에서 변동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한차례 표준편차가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가파른 속도로 일인당 시군 GRDP의 표준편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006년부터 표준편차는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다가 2008년도 세계금융위기 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시군단위별 경제력은 GRDP 기준으로 그 격차가 확대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대부터 GRDP의 지역 표준편차가 점차 증가한다는 것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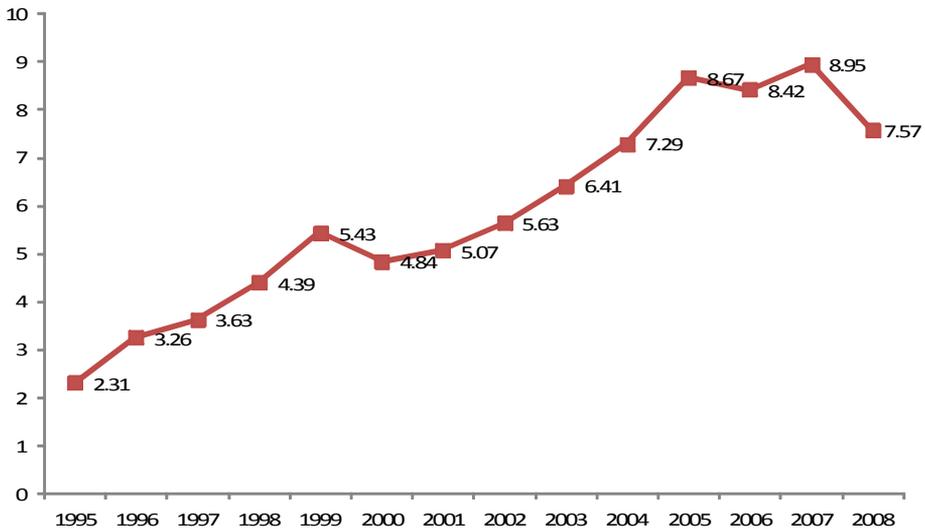
⁵ Barro & Sala-i-Martin(2004) 참조

⁶ 농가소득의 불평등도를 분석한 것으로 안동환(2004), 박준기 외(2005), 김정호(2005) 등이 있다.

⁷ 그러나 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소득의 수렴여부를 분석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분산이 소득수렴 여부를 나타내는 지에 대한 이론적 기반(micro-foundation)을 제시하지 않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Barro & Sala-i-Martin(2004) 참조).

자유주의에 입각한 구조조정, 금리인상 및 환율평가절하 등을 통한 시장경쟁의 압박은 시·군 지역 간 성장격차를 확대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2-2. 1인당 시군 GRDP의 표준편차



2.2. β 수렴

상대적으로 동질지역일수록 경제력이 수렴하는 현상을 보인다는 것에 착안하여 초기조건을 경제력 격차의 설명요인으로 상정하여 지역 간 소득의 수렴 및 발산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을 β 수렴 검정이라 정의한다(Barro & Sala-i-Martin, 2004). 조건부 β 수렴 검정에 앞서 먼저 다음과 같은 추정식을 세워 지역의 초기조건인 일인당 GRDP 수준에 따라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본다.

$$\ln(GRDP_{i,T}/GRDP_{i,T_0}) = a_0 + a_1 \ln(PGRDP_{i,T_0}) + \epsilon_i \quad (2)$$

여기서 i 는 시·군을 의미.

$a_1 > 0$ 이면 초기조건인 T_0 년의 지역총생산이 큰 지역일수록 성장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초기조건이 양호한 지역일수록 지역총생산(GRDP)의 성장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뜻한다. $a_1 < 0$ 이면 초기조건이 양호한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전통적 Solow-Swan의 경제성장 수렴현상을 나타낸다. 이를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가진 국가, 지역이나 개인의 소득이 더 빨리 증가하여 결국 모든 국가, 지역 또는 개인의 소득이 동일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의미에서 절대수렴(absolute convergence)이라 한다.

지역의 초기조건인 지역의 1인당 GRDP를 설명변수로 회귀분석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경제성장은 지역의 초기조건인 1인당 GRDP 수준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인당 GRDP 수준에 따라 성장률은 음(-)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유의적으로 계측되었다. 따라서 초기조건인 1인당 GRDP가 큰 지역일수록, 즉 선성장지역보다는 지역의 1인당 GRDP가 낮은 후진지역일수록 성장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3. 1998~2008년 절대수렴

GRDP 성장률	추정값	표준편차	t 값	$P > t $
1998년 1인당 GRDP	-0.2735668	0.0775555	-3.53	0.001
상수항	1.405081	0.1627386	8.63	0.000

이상의 분석에서 σ 수렴 검정과 절대수렴 검정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분산의 변동 정도에 따른 σ 수렴 검정방법은 우리나라의 시군 간 GRDP가 발산하였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1인당 GRDP 수준이 낮은 지역의 GRDP 성장률은 높고, 1인당 GRDP 수준이 높은 부유한 시군의 GRDP 성장률이 낮아 궁극적으로 시군의 GRDP를 수렴한다는 절대수렴 가설이 동시에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간 성장이 수렴과 발산의 특징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을 비슷한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사

한 지역끼리 수렴·발산 여부를 검정하는 조건부 수렴(conditional convergence)을 검정하였다.

인접성을 나타내는 동일 행정구역, 시군의 GRDP 수준, 시·군의 인적자본 수준 등을 기준으로 유사지역별로 구분하였을 때, 지역유형별로 경제성장의 수렴현상이 발생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조건부수렴검정이다. 먼저 동일지역 여부조건으로 (1) 「경기지역」과 「경기 외 지역」으로 2분류하고, (2) 다음으로 「경기지역」, 「경남지역」, 그리고 「그 외 지역」으로 3분류하여 수렴여부를 분석한다. (3) 끝으로 지역의 인적자본을 대변하는 65세 이상 인구비중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인적자본이 동일한 지역의 경제성장은 수렴하는가의 여부를 검정하였다.

2.2.1. 경기지역 vs 경기 외 지역(강원, 경남, 경북)

시·군을 경기지역과 경기 외 지역 2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부류의 시·군 간 GRDP의 수렴 여부를 검정하였다. 경기지역은 시군간 경제성장률이 수렴하고, 경기 외 지역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은 초기조건에 의해 경제성장률이 절대적으로 수렴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계측되었다. 즉, 경기지역의 시군은 수도권 지역이라는 지역적 동질성으로 인해 시·군 간 경제성장률이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 이외의 지역은 시·군 간 경제성장률이 수렴한다는 것을 유의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지역적으로 동질성이 담보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4. 1998~2008년 절대수렴: 경기지역

GRDP 성장률	추정값	표준편차	t 값	P> t
1998년 일인당 GRDP	-0.3969126	0.1064755	-3.73	0.001
상수항	1.731037	0.2342719	7.39	0.000

표 2-5. 1998~2008년 절대수렴: 경기 이외지역

GRDP 성장률	추정값	표준편차	t 값	P> t
1998년 일인당 GRDP	-0.1472155	0.1113873	-1.32	0.191
상수항	1.121309	0.2286822	4.90	0.000

2.2.2. 경기지역 vs 경남지역 vs 그 외 지역(강원, 경북)

한편 경기 이외 지역에서 부산, 울산, 배후로 하는 경남지역을 따로 분류하여 경남지역에 속하는 시·군에 대하여 GRDP의 수렴 여부를 검정하였다. 검정 결과 경남지역 시·군의 GRDP는 수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은 경기지역에 비하여 지역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상이하고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경기, 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하나로 묶어 시군의 GRDP 수렴 여부를 검정한 결과 또한 시군 간 GRDP는 수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경기지역을 제외하고 시군 간 경제성장 수렴여부가 상이하게 계측되었다. 상대적으로 동질성을 가진 경기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역소득의 절대수렴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 배후지역인 경기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은 시·군 간 GRDP 성장률이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역 간 이질성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지역별 소득격차의 수렴 및 발산 여부는 지역의 GRDP 초기조건과 함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소인 지역의 생산요소부존 조건, 사회기반시설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들 조건을 고려하고 상대적으로 동질 지역을 분석하여 지역소득격차 완화 및 발산여부를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상대적 β 수렴조건이라 한다.

표 2-6. 1998~2008년 절대수렴: 경남지역

GRDP 성장률	추정값	표준편차	t 값	P> t
1998년 일인당 GRDP	-0.1551429	0.2101993	-0.74	0.471
상수항	1.160443	0.453799	2.56	0.020

표 2-7. 1998~2008년 절대수렴: 경기 및 경남 외 지역

GRDP 성장률	추정값	표준편차	t 값	P> t
1998년 일인당 GRDP	-0.161331	0.139799	-1.15	0.256
상수항	1.138972	0.2798889	4.07	0.000

2.2.3. 상대수렴: 인적자본가설

상대적 β 수렴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특정 시·군의 일인당 GRDP 수준뿐만 아니라 서울과의 거리, 농업생산비중, 지역의 65세 인구비중 등을 설명변수로 추가한 추정식을 세운다. 서울과의 거리는 경기 지역 시·군들이 절대수렴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고, 농업생산비중은 농업지역이라는 유사지역끼리 수렴하리라는 가설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비중을 지역소득격차의 결정요인으로 채택한 것은 인적자본이 지역경제성장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일종의 인적자본가설(human capital hypothesis)에 연유한다.⁸ 즉, 인적자본이 풍부한 시·군 지역일수록 경제성장속도가 빠르고, 이들 인적자본이 유사한 지역끼리 경제성장이 수렴한다는 다중균형(multiple equilibrium)이 있는 ‘내생적 성장 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과 맥을 같이 한다.

⁸ 인적자본을 구성하는 주요 두 가지 요소는 지식과 건강이다. 지식은 학력 및 경험으로 대리변수화할 수 있고, 건강은 연령과 의료시스템으로 대리변수화할 수 있다.(Becker 1993)

18 지역 간 소득격차

$$\ln(GRDP_{i,T}/GRDP_{i,T_0}) = a_0 + a_1 \ln(PGRDP_{i,T_0}) + X\beta + \epsilon_i$$

여기서 X: i 지역과 서울 간의 거리, i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비중, i 지역의 농업생산비중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실제 추정식은 서울과의 거리, 농업비중 조건은 유의적으로 계측되지 않았고,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유사한 지역, 즉 인적자본이 유사한 시·군들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결과는 <표 2-8>과 같다.

표 2-8. 1998~2008년 조건부수렴: 인적가설

dlngrdp10l	추정계수	표준편차	t 값	P> t
lnpgrdp10l	-0.353297	0.0723043	-4.89	0.000
rover65	-1.694039	0.3763406	-4.50	0.000
상수항	1.836088	0.1755156	10.46	0.000

- dlngrdp10l : GRDP 성장률(1998~2008) [종속변수]
- lnpgrdp10l : 1998년 1인당 GRDP
- rover65 : 각 지역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 (0<x<1)

1998~2008년의 11년 간의 지역별 GRDP의 성장률을 지역의 초기조건인 일인당 GRDP와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중에 의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추정방법은 1998~2008년의 11년을 총체적 분석대상 구간으로 정하였으나 일관된 자료의 부족을 우회하기 위해 패널자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지역연구의 속성상 주어진 구간에 시·군별로 일관된 자료를 구하기가 용이하지 않기에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각 종류별로 포괄 기간이 서로 다른 불균형(unbalanced) 패널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효과적 추정치를 담보하기 위해 일원고정효과(one-way fixed effect) 모형을 사용하였다.⁹

일인당 GRDP가 높을수록 지역의 성장률이 음(-)으로 유의적으로 계측되었다는 것은 지역별 성장률이 수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그 지역의 고령화 비중이 높을수록 그 지역의 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지역의 인적자본이 결핍지역일수록 지역의 경제성장은 낙후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인적자본이 높은 지역일수록 그 지역의 성장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의 유효인력(effective labor forces)에 따른 지역 간 인적자본의 쏠림이동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인적자본이 유사한 지역끼리 경제성장이 수렴한다는 것은 인적자본이 높은 지역들이 수렴하는 균제상태(steady state) 경제성장률과 인적자본이 낮은 지역의 균제상태 경제성장률의 다중균형(multiple equilibrium)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적 수렴의 경우 장기균형수준의 소득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장기균형으로 수렴하는 시·군들 사이에는 소득의 수렴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그 격차가 시간이

⁹ 일원고정효과(one-way fixed effect)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식을 가정한다.

$$y_{it} = \alpha + \beta x_{it} + u_i + e_{it} \quad i = 1, 2, \dots, n \text{ 및 } t = 1, 2, \dots, T \quad (\text{식 1})$$

u_i = 패널 개체에 따른 이질성(heterogeneity) 오차항

e_{it} = 패널 개체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순수한 오차항

<식 1>의 추정치가 일치추정량이 되기 위해서는 $\text{cov}(x_{it}, u_i) = 0$ 이어야 하므로 아래와 같은 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bar{y}_i = \alpha + \beta \bar{x}_i + u_i + \bar{e}_i \quad i = 1, 2, \dots, n \quad (\text{식 2})$$

(단, \bar{y}_i , \bar{x}_i , \bar{e}_i 는 패널 그룹별 평균값)

<식 2>에서 <식 1>을 빼주면 within 변환을 적용한 추정모형이 된다.

$$(y_{it} - \bar{y}_i) = \beta(x_{it} - \bar{x}_i) + (e_{it} - \bar{e}_i) \quad (\text{식 3})$$

<식 3>에는 오차항 u_i 가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text{cov}(x_{it}, u_i) \neq 0$ 이더라도 OLS 추정을 통해 β 에 대한 일치 추정량을 구할 수 있으며, <식 3>를 추정하면 그 결과를 이용하여 각 패널 개체별 특성인 u_i 를 사후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지나면서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격차의 발산 원인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자본투자량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인적자본과 이를 활용하는 메커니즘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내생적 성장이론 (endogenous growth theory)’과 일치한다.¹⁰

지역 간 격차의 원인은 초기의 일인당 GRDP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인적 부존자원에 의하여 발생한다. 그리고 부존자원의 차이는 체증적 수익을 수반하여 잘되는 지역은 더 잘되는 쏠림현상을 유발하여 지역 간 격차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¹

3. 농업부문 격차

농업부문의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 경지규모와 판매금액 변화를 살펴본다. 먼저 경지규모별 변화를 살펴보면 경지 없는 농가를 포함한 경지규모 1ha 미만의 농가 비중이 2000년에 60.2% 였으나 2005년 63.2%, 2010년에는 65.8%로 증가하였다. 반면 10ha 이상의 대규모 농가 또한 증대하는 것

¹⁰ 이는 Romer(1986)가 명시적으로 규명한 경제성장의 장기균형에서 체증적 수익이 발생하는 요인과 동일하다. 경제성장의 요인이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자본투자량에 의해서 종속되며 자본투자가 지속적으로 수반되면 모든 지역이 하나의 균제상태로 수렴하여 경제성장에 있어 수익체감이 발생하여 후발지역(국가)이 선발지역(국가)을 ‘따라잡을 수 있다(catch up)’는 Solow-Swan류의 신고전학과 경제성장이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제 3세계에 지속적인 자본투자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경제성장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Romer는 한 지역 또는 국가의 인적자본이 풍부할 경우 동일한 투자행위가 지역 또는 국가에 미치는 파급효과(외부효과)가 - 신기술 및 정보의 전파-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크고 상대적으로 빨라 두 지역 간의 격차는 커지고, 두 지역의 장기 균제상태는 상이하다는 것을 보였다.

¹¹ 한편, 지역의 농업생산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역경제성장률이 낮게 나타나고, 농업의 지역에 미치는 부가가치 기여도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경우 일인당 GRDP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1~2ha의 소농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경지규모의 농가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경지규모별 농가 수(전국)

단위: 가구

	2000(가구, %)		2005(가구, %)		2010(가구, %)	
	합계	1,383,468	(100.0)	1,272,908	(100.0)	1,177,318
경지없는 농가	14,170	(1.0)	17,017	(1.3)	13,556	(1.2)
1ha 미만	819,260	(59.2)	788,466	(61.9)	760,352	(64.6)
1~2	351,534	(25.4)	280,685	(22.1)	228,540	(19.4)
2~10	195,290	(14.1)	180,634	(14.2)	165,485	(14.1)
10ha 이상	3,214	(0.2)	6,106	(0.5)	9,385	(0.8)

자료: 농업총조사, 각 연도

농축산 판매금액별 농가수 변화를 살펴보면 판매금액이 없는 농가 또는 연간 판매금액이 50만원 이하의 농가 비중이 2000년 48.2%에서 2005년 51.7%, 2010년 53.1%로 증가하는 동시에 판매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농가비중은 2000년 6.5%, 2005년 10.2%, 2010년 12.9%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평균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인 농가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농업측면에서도 생산과 판매규모 격차가 증가하고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 농축산 판매금액별 농가 수(전국)

단위: 가구

	2000(가구, %)		2005(가구, %)		2010(가구, %)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합계	1,383,468	(100.0)	1,272,908	(100.0)	1,177,318	(100.0)
판매없음	90,612	(6.5)	120,384	(9.5)	125,089	(10.6)
500만원 미만	576,634	(41.7)	537,438	(42.2)	500,288	(42.5)
500~1000	291,134	(21.0)	211,440	(16.6)	173,407	(14.7)
1000~2000	226,191	(16.3)	173,205	(13.6)	140,759	(12.0)
2000~3000	108,569	(7.8)	99,694	(7.8)	85,665	(7.3)
3000~5000	59,510	(4.3)	73,134	(5.7)	72,623	(6.2)
5000~1억	23,146	(1.7)	41,115	(3.2)	53,401	(4.5)
1억~2억	5,865	(0.4)	11,249	(0.9)	17,366	(1.5)
2억원 이상	1,807	(0.1)	5,194	(0.4)	8,660	(0.7)

자료: 농업총조사, 각 연도

지역 간 격차 실태를 유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변수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 교육, 의료 등 지역사회의 현황과 발전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간 또는 지역 내의 격차실태를 (1) 경제적 측면, (2) 지식을 측정하는 교육여건 측면, (3) 삶의 질과 사회복지를 측정하는 의료보건의 세 가지 측면에서 지역격차를 측정하도록 하는 지수를 개발한다.

국가 간 발전비교에 있어 일인당 GDP가 국민의 삶의 만족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UNDP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식 및 인적자본을 나타내는 문자해독 및 교육수준, 건강 정도를 나타내는 기대수명을 포함하여 UNDP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본 절의 지역격차지수는 UNDP의 HDI를 참조하여 한 나라의 지역발전지수를 작성하였다.

1. 지역격차지수 개발

지역별 발전 정도와 격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의 각 분야별 실태와 평가를 지수로 환원하면 지역의 발전 및 격차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j 지역의 i 분야가 전국에서 점하는 상대적 위상은 다음 식과 같이 지수화 가능하다. 즉, 지역의 특정분야의 실태를 특정분야가 가장 잘되

고 있는 지역과 가장 낮게 나타나는 지역과 비교하여 그 지역의 특정 분야의 상대적 점수를 [0, 1]의 지수로 변환하여 지역의 격차상태와 그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H_{ij} = \frac{X_{ij} - \underset{k}{Min}(X_{ik})}{\underset{k}{Max}(X_{ik}) - \underset{k}{Min}(X_{ik})}$$

여기서 H_{ij} 는 j지역의 i분야 X_i 변수 현황, 즉 X_{ij} 을 전국과 비교하여 지수화 한 것이다. $H_{ij}=0$ 는 j지역의 i분야 변수 X_{ij} 에 관한 성과가 최저라는 것을 의미하고, $H_{ij}=1$ 은 X_{ij} 에 관한 성과가 최고라는 것을 의미한다(Kim 1998).

비교분야의 개수에 따라 H_{ij} 를 비교하여 해당 i분야의 개수만큼 산술평균하여 구하면 j지역이 전국에서 점하는 상대적 점수를 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식은 다음과 같다.

$$H_j = \frac{1}{n} \sum_{i=1}^n H_{ij}$$

H_j 는 j 지역(또는 계층)의 종합평가지수가 된다. 여기서 $\underset{k}{Max}(X_{ik})$, $\underset{k}{Min}(X_{ik})$ 를 시간과 관계없이 고정시킬 경우¹² H_j 의 변화를 시계열 비교함으로써 시간에 따른 j지역의 실태변화와 격차원인의 동태적 비교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물론 횡단면 비교를 통해서는 타지역 및 계층 간의 상대적 비교분석 또한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발전 정도와 격차를 나타내는 주요 항목 중 지역

¹² 합리적인 최대값과 최소값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주어진다. 예를 들어 지역의 고용기회, 즉 15세 인구 대비 사업체 총종사자 수 비중이 최대값 0.9, 최소값 0.2를 가진다고 사전적으로 가정한다. 최대 고용률 0.9는 실망실업, 취업준비생 등을 고려한 실질 실업률이 20% 수준에 이른다는 보고와 함께 정부의 실업률 통계치 4%대를 감안할 때 최소 실질 실업률이 10%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의 경제적 측면, 생활 측면, 사회복지 측면의 3개 부문을 지역발전 지수의 요소로 택하여 분석한다. 경제적 측면에는 일인당 GRDP와 15세 이상 인구대비 사업체 총종사자 수로 정의된 고용기회가 세부변수로 포함되고, 생활측면에는 교육여건을 반영하는 Km²당 초중고 학교 수, 학생 천명당 사설학원 수를 세부변수, 사회복지 측면에는 의료보건의료인인 1,000명당 의료인 수와 병상 수를 세부변수로 택하였다.

경제적 측면에 고용기회를 포함한 것은 경제력에서 일인당 GRDP로 대변되는 현재의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소득원 변화를 통한 미래소득의 변화를 가늠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미래의 소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적자본을 들 수 있고 인적자본은 지식과 건강에 의하여 좌우된다. 따라서 인적자본 중 지식을 반영하는 변수를 생활측면에서는 교육여건을 대리변수(alternative variables)로, 건강수준을 대변하는 변수는 사회복지측면에서 의료여건을 대리변수로 선택하였다.¹³

선택된 변수의 최대·최소값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적 측면을 측정하는 지표 중 지역의 일인당 GRDP는 80백만원을 최대값으로, 최소값은 8백만으로 상정하였다. 2005년도 일인당 GRDP의 최소값이 8.3백만원, 2008년도 일인당 GRDP의 최대값이 77.2백만원이기에 일인당 GRDP의 범위가 최대·최소구간에 포함된다. 고용기회 또한 마찬가지로 최대값을 0.9, 최소값을 0.2로 상정하였다.¹⁴

교육여건 지표는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공교육의 경우 평방 km당 학교 수의 최대값은 2.5개, 최소값은 0개로 가정하였고, 사교육의 경우 천명당 학원 수의 최대값은 4개, 최소값은 0개로 가정하였다.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의료보건의료인인 수와 병상 수로 구성된다. 천명당 의료인 수와 천명당 병상 수의 최대값은 각각 30명, 85병상 수이고 최소값은 0으로 가정하였다.

¹³ 관련 타 변수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으나 자료의 시계열상 일관성과 함께 자료 구입의 한계가 있기에 3분류 6개 변수로 그친다.

¹⁴ 자세한 설명은 각주 12 참조.

이상과 같이 정의된 RDI는 횡단면뿐만 아니라 시계열상의 동태적 분석까지 가능하다. 즉, 시계열의 동태적 비교를 통해 각 지역의 전년 대비 발전 정도와 함께 횡단면비교로 타 지역과의 발전 정도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정의된 RDI는 Arrow(1963)가 정의한 사회후생 함수가 만족하여야 하는 4가지 조건 중의 하나인 ‘부적절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IRA: 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 조건을 충족한다.¹⁵ 이는 최댓값과 최솟값을 사전에 고정시킴으로써 자신과 관계없는 타 지역의 발전결과에 따라 해당지역의 (비록 상대적 순위는 변하더라도) 절대점수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지역발전지수는 기존 연구에서 문제로 제시된 변수 선택 및 타 지역의 성과에 따라 해당지역의 점수가 변화하는 상황을 우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⁶

¹⁵ Arrow(1963)에 의하면 사회선택(Social Choice) 또는 후생(Social Welfare) 함수가 만족하여야 하는 4가지 조건은 (1)이행성(transitivity), (2)파레토 효율(Pareto efficiency), (3) 부적절한 대안으로부터 독립(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 (4)비독재성(non-dictatorship)이다. 그러나 이들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회선택 또는 사회후생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Arrow의 불가능정리(impossibility theorem)이다. 4가지 조건 중 한 개를 제외하면 사회선택함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가능성 정리(possibility theorem)가 된다.

¹⁶ 송미령 외 (2011)은 2008년부터 농어촌의 전반적인 발전 실태를 분석할 수 있는 지역발전지수(RDI, Regional Development Index)를 개발하여 시군별 발전을 비교하고 있다. RDI가 농어촌지역의 발전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반영하기 위해서는 한 시점에서 지역 간 발전실태의 비교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른 지역 자체의 변화실태를 반영하여야 한다. 시간에 따른 지역발전실태의 비교는 RDI의 구성요소가 시계열적으로 비교 가능하도록 시간과 무관하게 선택되어야 하나 송미령 외는 매년 RDI의 구성요소를 달리함으로써 시간에 따른 지역발전실태의 비교와 그 요인 분석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동태적 비교뿐만 아니라 발전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RDI 구성변수와 그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사전에 결정한다. 사회후생함수로서 지수가 가져야 하는 일반적 특성과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는 Kim(1998) 참조.

2. 지역발전지수 분석

이상에서 정의된 지역발전지수를 가지고 광역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156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5/2008년도의 RDI 값과 그 변화를 계산하였다.¹⁷ 2005년도의 RDI의 최댓값은 33.07, 최솟값은 3.71, 평균값은 16.49이고, 2008년도는 각각 33.86, 4.62, 21.01로 나타났다. 3년 동안 지역발전지수의 평균값은 27.4% 증가하였다. 최댓값보다는 최솟값 및 평균값의 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발전지수가 낮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2005~2008년간 지역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1. 지역발전지수와 그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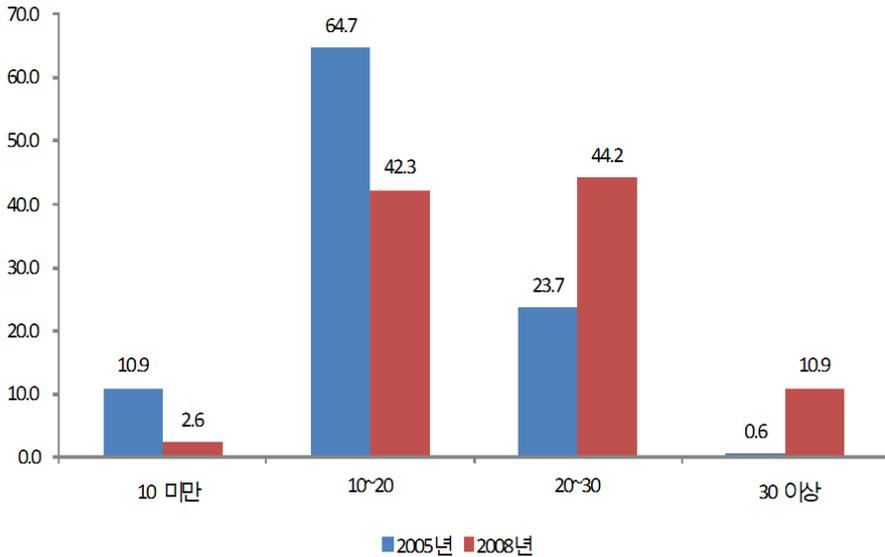
	2005년	2008년	변화율(%)
최대값	33.07	33.86	2.4
최소값	3.71	4.62	24.5
평균값	16.49	21.01	27.4

한편 RDI 지수값을 ‘10미만(저발전지역)’, ‘10~20(중저발전지역)’, ‘20~30(중고발전지역)’, ‘30 이상(고발전지역)’으로 구분한 뒤 각 구간별 도수분포의 변화를 측정하면 시기별로 RDI의 발전 정도를 규명할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RDI 값이 10 미만인 지역인 저발전 지역이 2005년도 10.9%에서 2008년도에는 2.6%로 그 비중이 낮아졌고, 반면 RDI 값이 30 이상인 고발전 지역이 0.6%에서 10.9%로 증가하였다.¹⁸

¹⁷ 본 연구에서는 지수가 [0, 1] 값을 갖는 것이 아니라 소수점 4째 자리까지 고려하기 위해서 백분위로 나타내었다. 따라서 지수값은 [0, 100]의 값을 갖는다.

¹⁸ 2005년 대비 2008년도 RDI 구분이 증가한 지역은 77개, 동일한 지역은 79개로 나타났다.

그림 3-2. 시기별 RDI 분포



2005년 대비 2008년 지역발전지수 그룹 중에서 유형값이 증가한 경기도 지역은 전체 37개 시군 중에서 20개 시군으로 54.1%에 달하였고, 경기도 이외 지역은 119개 시군에서 57개 시군으로 47.9%에 불과함으로써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지수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수도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성장하였다는 앞 장의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각 시군별로 자신의 RDI에서 어떤 부분이 타 지역에 비해 덜 발전되었고 격차가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다. 먼저 전국 평균의 경우 2005년 전국 평균 RDI는 16.47인데 2008년 지수 평균값은 21.01로 27.4%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도 교육여건지수가 59.8% 증가함으로써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여건 개선에는 사교육 부문의 증가, 즉 학생 1,000명당 사설학원 수의 증가로 인한 교육여건부문의 지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경제력 지수는 3.9% 증가에 그침으로써 2005~2008년 동안 경제력 증가는 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고용기회 지수는 감소함으로써 2005~2008년 동안 지역의 고용사정은 더 악화된 반면 일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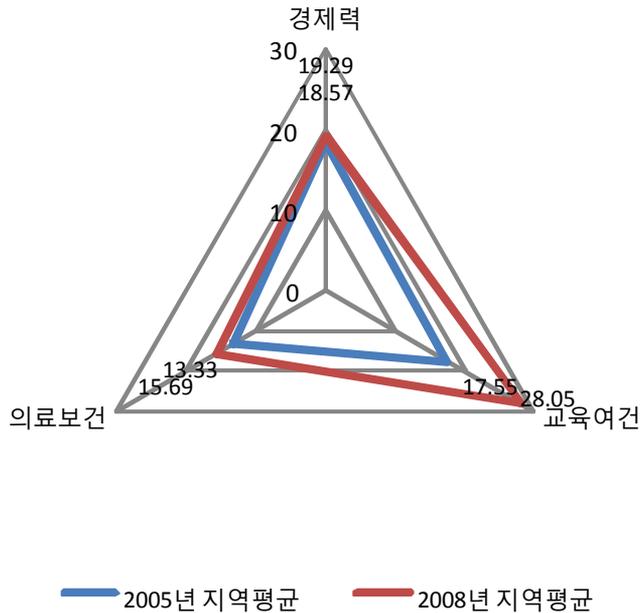
GRDP는 25.4% 증가함으로써 지역경제는 고용이 동반되지 않는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 간 경제력 격차가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보건지수의 경우 의료인수의 증가보다는 하드웨어인 병상 수의 증가에 힘입어 1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지역발전지수 요소별 변화율

	2005년 지역평균	2008년 지역평균	변화율(%)
RDI	16.49	21.01	27.4
경제력	18.57	19.29	3.9
GRDP	13.6	17.05	25.4
고용기회	23.54	21.54	-8.5
교육여건	17.55	28.05	59.8
공교육	6.53	6.88	5.4
사교육	28.58	49.22	72.2
의료보건	13.33	15.69	17.7
의료인 수	16.98	19.02	12.0
병상 수	9.69	12.35	27.5

RDI의 요소별 변화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시군의 경우 전국 평균 RDI의 요소별 변화 그림을 이용하여 시군의 발전측면에서 어느 부분이 상대적으로 결핍되어 있고, 타 시군과의 격차는 어느 정도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 결과 시군의 합리적 발전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그림 3-3. RDI 요소별 변화



3. 지역발전지수 사례지역분석¹⁹

위의 지역발전지수를 경기 양평, 강원 영월, 충북 괴산군, 강원 양양, 충

¹⁹ 사례분석 중 강원 양양, 충남 홍천, 경남 남해군 지역은 해당 시·군지역의 전체인구는 감소하였으나 지역의 중심부인 읍부지역의 인구는 증가한 지역으로 유의적으로 선택되었다. 반면, 경기 양평은 인구와 함께 광공업체 및 도소매업체 수가 전국 평균보다 증가한 지역, 강원 영월, 충북 괴산은 인구도 감소하고 광공업 및 도소매업체 수도 전국 평균보다 감소한 지역인데 강원 영월의 경우 2000~2005년의 경우 비록 인구는 감소하였으나 광공업체 변화율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이었다.

남 홍천, 경남 남해군에 적용하였다. 6개 사례지역의 RDI 지수는 양 개년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강원도 영월군의 경우 경제력 지수는 양 개년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고, 2005년 의료보건지수 또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충북괴산군의 경우 교육여건지수는 2005년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기 양평의 경우 2005, 2008 양 개년 모든 부문에서 RDI가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일자리 증가와 교육여건, 의료보건시설 개선 등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⁰

경기도 양평의 경우 경제력 지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측면에서 2005년보다 발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력 측면도 1인당 GRDP 수준은 증가하였으나 인구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해 고용기회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낮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원도 영월의 경우 사교육 부문의 증가 때문에 지역발전지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동안 강원도 영월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귀농·귀촌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충북 괴산의 경우 사교육 여건의 퇴보로 지역발전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양양, 충남 홍천, 경남 남해군의 경우 RDI 지수는 양 개년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3개 지역 모두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충남 홍성군의 경우 2008년도 지역발전지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제력지수는 비록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나 의료보건 지수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기 때문이다. 홍성군의 경우 비록 인구는 감소하였으나 인구 1,000명당 의료인 수의 증가로 의료보건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발전지수는 사례 지역의 지역발전 방향을 가늠케 한다. 경기 양평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하여 경제력 지수가 열악한 바 향후 지역의 발전 방향을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득원 증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

²⁰ 경기 양평군의 경우 학생 천명당 학원 수를 나타내는 사교육 지수의 향상에 힘입어 2008년 RDI가 증가한 것을 나타냈다.

을 알 수 있다. 강원 영월의 경우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적 투자가 요구되고, 충북 괴산의 경우 교육여건 및 의료보건여건 개선이 요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강원 양양의 경우 경제력 지수는 높으나 사회간접자본인 의료보건과 교육여건이 미비했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얻고 있기에 사회간접자본에의 투자가 요망된다. 경남 남해의 경우 경제력 때문에 지역발전지수가 낙후된 지역으로 특히 고용소득원을 확충할 수 있는 지역발전 전략이 요망된다.

표 3-3. 6개 지역비교: 지역발전지수(1)

연도	구분	경기도 양평균	강원 영월군	충북 괴산군
2005년	지역개발지수	11.84	15.31	13.41
	경제력 지수	11.19	21.11	14.69
	1인당 GRDP	6.92	17.59	11.18
	고용기회	15.46	24.63	18.21
	교육여건지수	13.38	10.23	22.99
	공교육	1.91	1.21	1.28
	사교육	24.84	19.26	44.69
	의료보건지수	10.95	14.58	2.54
2008년	의료인 병상수	12.74 9.15	16.93 12.23	4.4 0.67
	지역개발지수	13.46	18.7	12.75
	경제력 지수	9.79	20.68	18.08
	1인당 GRDP	8.18	17.0	12.76
	고용기회	11.41	24.36	23.4
	지식문화지수	18.89	20.12	11.92
	공교육	1.87	1.06	1.28
	사교육	35.91	39.18	22.56
의료보건지수	11.71	15.31	8.26	
의료인 병상수	13.99 9.43	18.24 12.38	7.93 8.59	

표 3-4. 6개 지역비교: 지역발전지수(2)

연도	구분	강원 양양군	충남 홍성군	경남 남해군
2005년	지역개발지수	12.66	15.24	9.36
	경제력 지수	21.92	13.33	7.46
	1인당 GRDP 고용기회	15.4	10.71	3.52
		28.44	15.95	11.41
	교육여건지수	9.28	15.27	12.53
	공교육 사교육	1.4	4.15	3.36
		17.16	26.39	21.71
의료보건지수	6.37	17.13	8.08	
의료인 병상수	12.13	24.05	12.35	
	1.41	10.21	3.81	
2008년	지역개발지수	17.66	21.32	13.15
	경제력 지수	27.92	14.95	7.81
	1인당 GRDP 고용기회	21.56	13.26	6.71
		34.27	16.63	8.90
	교육여건지수	21.56	26.84	21.90
	공교육 사교육	1.34	4.05	3.36
		41.8	49.62	40.44
의료보건지수	3.49	22.18	9.74	
의료인 병상수	5.69	31.49	13.48	
	1.3	12.88	6.01	

지역유형과 격차

지역유형은 지역총생산을 규정하는 주요요인인 지역인구와 광공업체 또는 도소매업체 수의 증감률을 이용하여 구분할 수 있다. 지역인구의 증감 여부와 지역의 광공업체 변화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낮음에 따라 전국 시·군을 4개 유형으로 구분한다.²¹

1. 지역유형구분

2000~2005년, 2005~2009년의 지역인구 및 광공업체 수의 변화를 이용하여 4개 유형으로 구분, 양 시기별 유형의 개수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지역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정의하였다. 첫째, 지역인구도 증가하고 광공업체 증가율도 전국 평균을 웃도는 I 유형. 둘째, 지역인구는 증가하나 광공업체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II 유형. 셋째, 지역인구는 감소하나 광공업체 수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III 유형. 넷째 지역인구도 감소하고 광공업체 수 증가율도 전국 평균을 밑도는 제 IV 유형이 그것이다. 각 유형의 특징과 변화양상은 다음과 같다.

²¹ 지역인구 변화가 “+”인 지역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지역거점 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다.

1.1. I 유형

지역의 인구증가율이 양(+)이고, 지역광공업체 증가율이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지역 증가율 평균이상인 지역이다. 이 중 경기지역을 제외한 광공업체 수의 변화가 양(+)인 지역은 자족성이 우세한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지역의 거점지역이다.

I 유형에 속하는 시·군의 비중은 2000~2005년 구간에는 18.00%였으나 2005~2009년 구간에는 14.10%로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광공업체 수 변화 대신 도소매업체 수의 변화를 기준으로 하면 2000~2005년의 21.09%에서 2005~2009년에 30.07%로 증가하였다.

1.2. II 유형

지역인구 변화율이 양(+)이거나 광공업체 수의 변화율이 전국시군지역 증가율 평균보다 낮은 지역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 주변 또는 지역거점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II 유형에 속하는 시·군의 비중은 2000~2005년 구간에는 10.00%였으나 2005~2009년 구간에는 24.36%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광공업체 수 변화 대신 도소매업체 수의 변화를 기준으로 하면 2000~2005년의 6.12%에서 2005~2009년에 7.84%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1.3. III 유형

지역인구변화는 ‘-’이나 광공업체 수 변화율이 전국 평균변화율을 상회하여 비농업부문이 상대적으로 강세인 지역인 산업일터이다. 그러나 시·도 중심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자족의 인구규모를 유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타지역으로부터 인구흡인력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

역이다.

Ⅲ유형에 속하는 시·군의 비중은 2000~2005년 구간에는 30.67%였으나 2005~2009년 구간에는 17.95%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광공업체 수 변화 대신 도소매업체 수의 변화를 기준으로 하면 2000~2005년의 17.95%에서 2005~2009년에 8.84%로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 IV 유형

지역인구변화가 ‘-’인 지역은 비수도권 지역이 주로 분포되어 있고, 그 중 광공업체 수의 변화율이 전국 시·군 평균보다 낮은 지역으로 농촌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다.

IV유형에 속하는 시·군의 비중은 2000~2005년 구간에는 41.33%였으나 2005~2009년 구간에는 43.59%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공업체수 변화 대신 도소매업체 수의 변화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00~2005년의 63.95%에서 2005~2009년에 51.63%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역유형 분석

이상과 같이 2000~2005년, 2005~2009년의 지역인구 및 광공업체 수의 변화를 이용하여 4분한 결과, I 유형과 IV유형이 증가하는 방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구가 증가하면서 광공업 및 도소매업체 수 또한 전국 평균을 상회하면서 발전하는 지역이 증가하는 동시에, 인구가 감소하면서 광공업체 또는 도소매업체의 증가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소위 지역 간 발전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1. I 유형 지역 증가, IV 유형 지역 감소

연도별 지역유형 비교결과 I 유형 지역의 비중은 감소하고, IV유형 지역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05년 기간 동안 I 유형은 18.0%, IV유형은 41.3%를 점하였으나, 2005~2009년 기간 동안 I 유형은 14.1%로 감소하였고, IV유형은 43.6%로 2.3%p 증가하였다.

이는 인구가 증가하고 광공업체 수의 증가율이 전국 시군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의 비중이 증가하는 동시에, 인구가 감소하고 광공업체 수의 증가율이 전국 시군 평균보다 낮은 지역의 비중 또한 증가한다는 것이다. 인구가 몰리고, 광공업이 잘되는 지역의 비중은 늘어나는 동시에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상공업 또한 퇴락하는 지역이 동시에 증가한다는 것은 광공업체의 규모화가 진행되었고 지역 간 격차와 쏠림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의 광공업체 수 변화율은 지역산업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소수의 업체 수 변화에 따라서 크게 변화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의 도소매업체 수의 변화율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지역의 인구증감률과 도소매업체의 시군지역 평균변화율을 비교하면 2000~2005년 I 유형이 21.1%, IV유형은 63.4%였으나, 2005~2009년은 I 유형 30.1%, IV유형은 51.6%로 광공업과는 달리 도소매업체의 변화는 지역격차 완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²²

2.2.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대상 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대상지역은 IV유형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에서 경제성장의 낙수효과를 얻기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정책대상지역으로 채택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대상에 대한 정보의

²² 광공업과 도소매업체 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 지역 간 격차는 존재하나 격차의 심화 정도는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충분으로 야기되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정부실패(public failure)와 함께 시장에서 거래되어야 자원을 정부가 배분함으로써 자원이용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일종의 밀어내기 효과(crowding-out effect)를 경감할 수 있다. 왜냐하면 IV유형의 경우 시장에 맡겨둘 경우 자발적 참여자가 적을 뿐만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바라직한 수준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의 재량적 개입에 따른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소매업의 경우 IV 유형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은 지역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라도 시장에서는 소규모의 사업체가 자생적으로 영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IV유형을 중심으로 III유형이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중점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다.

표 4-1. 인구와 광공업체 수 기준 유형분류(2000~2005년)

2000~2005년		광공업체 수 증가율	
		(특별시,광역시 제외한) 시군지역 증가율 평균 이상	(특별시,광역시 제외한) 시군지역 증가율 평균 이하
인구	(+)	I 유형 (18.00%)	II 유형 (10.00%)
		원주시, 춘천시, 고양시, 군포시,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오산시, 의왕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거제시, 김해시, 양산시, 구미시, 칠곡군, 광양시, 제주시, 서산시, 아산시, 연기군, 천안시, 진천군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수원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군, 용인시, 의정부시, 진해시, 경산시, 순천시, 전주시, 청주시
	(-)	III유형 (30.67%)	IV유형 (41.33%)
		동해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평창군, 화천군, 파천시, 남해군, 의령군, 창녕군,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경주시, 고령군, 김천시, 문경시, 성주군, 안동시, 예천군, 울릉군, 청송군, 포항시, 곡성군, 보성군,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장성군, 진도군, 함평군, 고창군, 김제시, 무주군, 진안군, 당진군, 보령시,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홍성군, 음성군, 청원군, 충주시	강릉시, 고성군, 삼척시, 속초시,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홍천군, 횡성군, 가평군, 광명시, 연천군, 거창군, 고성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진주시, 합천군, 군위군, 봉화군, 상주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강진군, 고흥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완도군, 장흥군, 해남군, 화순군, 군산시, 남원시,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서귀포시, 공주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부여군, 태안군,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주: 2000~2005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지역 광공업체 증가율 평균 = 11.20%

표 4-2. 인구나 공공업체 수 기준 유형분류(2005~2009년)

2005~2009년		공공업체 수 증가율	
		(특별시,광역시 제외한) 시군지역 증가율 평균 이상	(특별시,광역시 제외한) 시군지역 증가율 평균 이하
인구	(+)	I 유형 (14.10%)	II 유형 (24.36%)
		화천군,구리시,안성시,양평군, 파주시,거제시,사천시,통영시, 고령군,울릉군,포항시,광양시, 군산시,완주군,서귀포시,제주시, 계룡시,당진군,서산시,아산시, 청원군,충주시	원주시,춘천시,횡성군,가평군, 고양시,과천시,광주시,김포시, 남양주시,동두천시,부천시,수원시, 시흥시,안산시,양주시,여주군, 오산시,용인시,의정부시,이천시, 평택시,포천시,하남시,화성시, 김해시,양산시,진해시,함안군, 경산시,구미시,칠곡군,목포시, 무안군,전주시,음성군,증평군, 진천군,청주시
	(-)	III유형 (17.95%)	IV유형 (43.59%)
		강릉시,동해시,양양군,인제군, 남해군,밀양시,산청군,의령군, 창녕군,함양군,상주시,안동시, 울진군,강진군,고흥군,보성군, 순천시,신안군,영광군,영암군, 장성군,장흥군,부안군,순창군, 공주시,부여군,예산군,홍성군 [동읍인구 증가 지역 8개(밀출), III유형 전체 대비 28.57%]	고성군(강원),삼척시,속초시,양구군, 영월군,정선군,철원군,태백시,평창군, 홍천군,광명시,군포시,성남시,안양시, 연천군,의왕시,거창군,고성군(경남), 마산시,진주시,하동군,합천군,경주시, 군위군,김천시,문경시,봉화군,성주군, 영덕군,영양군,영주시,영천시,예천군, 의성군,청도군,청송군,곡성군,구례군, 나주시,담양군,여수시,완도군,진도군, 함평군,해남군,화순군,고창군,김제시, 남원시,무주군,익산시,임실군,장수군, 정읍시,진안군,금산군,논산시,보령시, 서천군,연기군,청양군,태안군,괴산군, 단양군,보은군,영동군,옥천군,제천시 [동읍인구 증가 지역 11개(밀출), IV유형 전체 대비 16.18%]

주: 2005~2009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지역 공공업체 증가율 평균 = 14.73%

표 4-3. 인구와 도소매업체 수 기준 유형분류(2000~2005년)

2000~2005년		도소매업체 증가율	
		(특별시,광역시 제외한) 시군지역 증가율 평균 이상	(특별시,광역시 제외한) 시군지역 증가율 평균 이하
인구	(+)	I 유형 (21.09%)	II 유형 (6.12%)
		원주시, 고양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성남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군, 오산시, 용인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거제시, 김해시, 양산시, 경산시, 구미시, 칠곡군, 광양시, 진주시, 아산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동두천시, 부천시, 수원시, 의왕시, 순천시, 서산시, 연기군, 진천군
	(-)	III 유형 (8.84%)	IV 유형 (63.95%)
		강릉시, 동해시, 양양군, 과천시, 광명시, 사천시, 고령군, 강진군, 목포시, 화순군, 완주군, 태안군, 청원군	고성군,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가평군, 연천군,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함천군, 경주시, 군위군, 김천시,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포항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공주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군,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홍성군,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충주시

주: 2000~2005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지역 도소매업체 증가율 평균 = -7.89%

표 4-4. 인구와 도소매업체 수 기준 유형분류(2005~2009년)

2005~2009년		도소매업체 증가율	
		(특별시,광역시 제외한) 시군지역 증가율 평균 이상	(특별시,광역시 제외한) 시군지역 증가율 평균 이하
인구	(+)	I 유형 (30.07%)	II 유형 (7.84%)
		원주시, 춘천시,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주시, 구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군, 오산시, 용인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거제시, 김해시, 사천시, 양산시, 통영시, 함안군, 경산시, 구미시, 칠곡군, 포항시, 광양시, 군산시, 전주시, 계룡시, 당진군,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증평군, 진천군, 청원군, 청주시	화천군, 횡성군, 동두천시, 부천시, 평택시, 고령군, 울릉군, 목포시, 무안군, 완주군, 음성군, 충주시
	(-)	III 유형 (10.46%)	IV 유형 (51.63%)
		광명시, 군포시, 성남시, 안양시, 의왕시, 함양군, 성주군, 영주시, 순천시, 김제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태안군, 홍성군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연천군,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하동군, 합천군, 경주시, 군위군, 김천시,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천시, 예천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공주시, 서천군, 연기군, 예산군, 청양군,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주: 2005~2009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지역 도소매업체 증가율 평균 = -0.59%

3. 읍면별 격차분석

시군 내에서의 지역격차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동읍부와 면부로 나누어 인구변화를 분석한다. 먼저, 시군 전체의 인구는 감소하나 지역 중심부의 인구는 증가하는 유형은 시군 자체도 타 지역 시군에 비하여 격차가 벌어지나 시군 내에서도 지역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시군의 전체 인구는 증가하였으나 면부의 인구가 감소한 유형은 시군 전체로는 낙후되지 않으나 동일 시·군 내에서도 소외지역(remote area)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관심지역은 전체인구는 감소하였으나 지역의 중심부는 활성을 띠는 시·군 지역 내에서도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3.1. 전체인구 감소, 중심지 인구 증가지역

전체인구는 감소하였으나 중심지인 동읍지역의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2000~2005에는 광공업 기준 III유형 중에서 강원 양양군, 전남 영암군, 충남 당진군, 충남 홍성군, 충북 증평군, 충북 청원군의 6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한편 광공업 기준 IV유형 중에서는 강원 인제군, 강원 홍천군의 2개 지역으로 총 8개 시·군이 속해 있다.

2005~2009년은 광공업 기준 III유형에서 경남 남해군, 경남 의령군, 경남 함양군, 전남 순천시, 전남 영암군, 전북 부안군, 전북 순창군, 충남 보령시, 충남 홍성군의 9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광공업 기준 IV유형에서는 강원 홍천군, 전북 고창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임실군, 전북 장수군, 충남 연기군, 충북 괴산군, 충북 옥천군의 8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체인구는 감소하나 중심지 인구가 증가하는 유형은 2000~2005년 대비 2005~2009년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2009년 동안 제 III유형에서 중심지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28.57%를 점하고 있

고, 제 IV유형에서는 16.18%를 점하고 있다. 지역인구는 감소하나 지역의 중심지 인구는 증가하는 지역 내에서도 격차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시군의 전체인구는 증가하였으나 주변부인 면지역 인구가 감소한(경기지역 제외) 지역은 2000~2005년 구간에는 강원 원주시,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경북 경산시, 경북 구미시, 경북 칠곡군, 전남 광양시, 전남 순천시, 제주 제주시, 충남 서산시, 충남 천안시 등이 있었으나 2005~2009년 구간은 충남 연기군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인구는 증가하나 주변부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일시적 현상에 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 유형을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2. 시군 사례분석

시군의 전체 인구는 감소하였으나 시·군의 중심부인 읍부의 인구가 증가한 지역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지역 내에서도 격차가 발생하는 지역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강원 양양군, 충남 홍성군, 경남 남해군을 사례지역으로 선택하였다.

시군 지역 내의 읍면별 경지규모, 농축산물 판매금액, 연령별 농가인구분포 등을 살펴보면 지역의 중심인 읍부와 주변부인 면부와의 격차가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지역의 농가인구는 3개 지역 모두 감소하였으나 지역중심지인 읍부와 주변부인 면부의 농가인구분포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3개 지역 모두 2000년 대비 2010년에 지역중심지인 읍부에 거주하는 농가인구의 비중이 증가한 것을 나타났다. 그러나 2000~2010년 동안 읍부 거주 농가인구절대규모는 양양군의 경우 14.9% 증가, 홍성군의 경우 3.5% 증가하였으나 남해군의 경우 9.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2> 참조).

사례지역의 연령별 농가인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생산성이 가장 높은 연령층인 30~40대 농가의 읍부 거주 비중이 3개 지역 모두에서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고, 이들 연령층의 비중 증가폭이 가장 큰 지역은 양양군으로 나타났다.²³ 지역의 자생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양양군과 홍성군의 경우 비록 지역전체 인구는 감소하나 지역중심지 인구는 증가하고, 그 중에서도 젊은 연령층인 30~40대 인구구성이 지역중심지로 쏠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⁴

이와 같이 시·군 내에서도 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은 잘되는 지역 또는 부문으로의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 자원배분의 쏠림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국민경제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정책의 대상이자 고유 영역이다.

농촌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시장에서 민간의 활동을 위축하지 않고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전략, 즉 한정된 지역자원의 활용에 있어 민간을 밀어내는 역효과가 가장 적은 정책은 지역의 중심지보다는 지역주변부인 읍면부를 중심으로 민간의 경쟁원리를 도입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방식일 수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중점 육성 대상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중에서 주변부인 면부를 중심으로 육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²³ 2000~2010년 동안 읍부 거주 30~40대 농가인구 증가율은 홍성군이 15.9%, 양양군 9.6%, 남해군 -14.5%으로 읍부거주 농가인구 절대규모증가율은 홍성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²⁴ 제 3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양양군의 경우 지역발전지수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나 경제력 지수는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으로 영동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자생력을 갖춘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홍성군의 경우 의료보건지수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사회간접자본이 갖추어진 지역으로 평가된다.

글로벌화의 진행과 함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지역 및 계층 간 부의 격차를 확대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와 농촌의 격차뿐만 아니라 농촌 내부에서도 중심부와 주변부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 간·지역 내 발전격차 실태와 그 원인 분석 없이 지역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정책실패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밀어내기 효과를 초래한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역의 발전격차 실태를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지역 간 소득격차는 1995~2008년의 13개년 동안 일인당 지역총생산이 높은 지역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등 지역별로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경제성장 속도가 더 높게 형성되었다. 시간에 따라 지역 간 경제성장률의 격차는 더 벌어지지 않는으나 유의하게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지역의 경제성장이 인근 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다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s)’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간 소득 수렴·발산여부는 σ 수렴 검정과 절대수렴 검정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간 성장이 수렴과 발산의 특징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을 비슷한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건부 수렴여부를 검정하였다. 이를 위해 (1) 경기지역과 경기 외 지역을 비교 분석, (2) 경기지역, 경남지역, 나머지 지역의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기지역의 시군은 수

도권 지역이라는 동질성으로 인해 지역 간 경제성장률이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 이외의 지역은 지역 간 경제성장률이 수렴한다는 것을 유의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지역 간 동질성이 담보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상대수렴 가설 성립).

지역소득격차 결정요인분석으로는 인적자본 가설이 성립되었다(RDI 격차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GRDP의 성장률은 지역의 초기조건인 일인당 GRDP와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중에 의하여 유의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적자본이 높은 지역일수록 그 지역의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고, 지역유효인력(effective labor forces)에 따른 지역 간 인적자본의 쏠림이동이 나타난다.

지역발전지수를 이용한 지역 간 발전격차의 분석 결과 또한 지역 간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격차지수 중에서도 경제적 지수의 격차가 지역 간에 심각하게 나타났다.

한편 유의적으로 선택된 시군 지역 내의 읍면별 경지규모, 농축산물 판매금액, 연령별농가인구 등을 살펴보면 지역의 중심인 읍부와 주변부인 면부와의 격차가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대상 지역은 지역인구가 감소하고, 광공업체 수도 감소하는 IV유형, 즉 시장에서 경제성장의 낙수효과를 얻기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중점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한편 인구는 비록 감소하나 도소매업체 수는 증가하는 III유형의 경우 시장에서 소규모 사업체가 자생적으로 영위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지역인구감소 방지 및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안정적 근착이라는 의미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중점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다.

부록 1

경지규모별 농가 수와 연령별 농가인구

부표 1. 경지규모별 농가 수

2000년		(단위: 가구, %)							
	양양군			홍성군			남해군		
		읍부	면부		읍부	면부		읍부	면부
합계	3,110 (100.0)	547 (17.6)	2,563 (82.4)	12,613 (100.0)	2,870 (22.8)	9,743 (77.2)	10,622 (100.0)	1,027 (9.7)	9,595 (90.3)
경지없는 농가	12 (0.4)	2 (0.4)	10 (0.4)	188 (1.5)	66 (2.3)	122 (1.3)	15 (0.1)	4 (0.4)	11 (0.1)
1ha 미만	1,732 (55.7)	317 (58.0)	1,415 (55.2)	7,217 (57.2)	2,015 (70.2)	5,202 (53.4)	9,599 (90.4)	941 (91.6)	8,658 (90.2)
1~2	939 (30.2)	160 (29.3)	779 (30.4)	3,820 (30.3)	602 (21.0)	3,218 (33.0)	870 (8.2)	70 (6.8)	800 (8.3)
2~10	424 (13.6)	68 (12.4)	356 (13.9)	1,373 (10.9)	182 (6.3)	1,191 (12.2)	136 (1.3)	12 (1.2)	124 (1.3)
10ha 이상	3 (0.1)	0 (0.0)	3 (0.1)	15 (0.1)	5 (0.2)	10 (0.1)	2 (0.0)	0 (0.0)	2 (0.0)

2005년		(단위: 가구, %)							
	양양군			홍성군			남해군		
		읍부	면부		읍부	면부		읍부	면부
합계	3,404 (100.0)	721 (21.2)	2,683 (78.8)	11,108 (100.0)	2,618 (23.6)	8,490 (76.4)	9,242 (100.0)	932 (10.1)	8,310 (89.9)
경지없는 농가	32 (0.9)	11 (1.5)	21 (0.8)	194 (1.7)	42 (1.6)	152 (1.8)	33 (0.4)	7 (0.8)	26 (0.3)
1ha 미만	2,234 (65.6)	523 (72.5)	1,711 (63.8)	6,454 (58.1)	1,911 (73.0)	4,543 (53.5)	8,375 (90.6)	847 (90.9)	7,528 (90.6)
1~2	751 (22.1)	131 (18.2)	620 (23.1)	3,057 (27.5)	480 (18.3)	2,577 (30.4)	662 (7.2)	57 (6.1)	605 (7.3)
2~10	379 (11.1)	53 (7.4)	326 (12.2)	1,365 (12.3)	177 (6.8)	1,188 (14.0)	172 (1.9)	21 (2.3)	151 (1.8)
10ha 이상	8 (0.2)	3 (0.4)	5 (0.2)	38 (0.3)	8 (0.3)	30 (0.4)	0 (0.0)	0 (0.0)	0 (0.0)

2010년

(단위: 가구, %)

	양양군		홍성군		남해군				
	읍부	면부	읍부	면부	읍부	면부		읍부	면부
합계	3,047 (100.0)	736 (24.2)	2,311 (75.8)	11,082 (100.0)	3,234 (29.2)	7,848 (70.8)	7,804 (100.0)	903 (11.6)	6,901 (88.4)
경지없는 농가	32 (1.1)	8 (1.1)	24 (1.0)	180 (1.6)	52 (1.6)	128 (1.6)	20 (0.3)	7 (0.8)	13 (0.2)
1ha 미만	2,049 (67.2)	563 (76.5)	1,486 (64.3)	6,783 (61.2)	2,450 (75.8)	4,333 (55.2)	6,769 (86.7)	782 (86.6)	5,987 (86.8)
1~2	595 (19.5)	101 (13.7)	494 (21.4)	2,657 (24.0)	490 (15.2)	2,167 (27.6)	738 (9.5)	82 (9.1)	656 (9.5)
2~10	355 (11.7)	59 (8.0)	296 (12.8)	1,400 (12.6)	229 (7.1)	1,171 (14.9)	270 (3.5)	32 (3.5)	238 (3.4)
10ha 이상	16 (0.5)	5 (0.7)	11 (0.5)	62 (0.6)	13 (0.4)	49 (0.6)	7 (0.1)	0 (0.0)	7 (0.1)

부표 2. 연령별 농가인구

2000년

(단위: 명, %)

	양양군		홍성군		남해군				
	읍부	면부	읍부	면부	읍부	면부		읍부	면부
계	9,218 (100.0)	1,762 (19.1)	7,456 (80.9)	37,080 (100.0)	8,919 (24.1)	28,161 (75.9)	26,446 (100.0)	2,876 (10.9)	23,570 (89.1)
10세 미만	514 (5.6)	111 (1.2)	403 (4.4)	2,372 (6.4)	652 (7.3)	1,720 (6.1)	1,339 (5.1)	187 (6.5)	1,152 (4.9)
10-19	1,097 (11.9)	193 (2.1)	904 (9.8)	4,755 (12.8)	1,134 (12.7)	3,621 (12.9)	2,445 (9.2)	286 (9.9)	2,159 (9.2)
20-29	933 (10.1)	214 (2.3)	719 (7.8)	2,882 (7.8)	874 (9.8)	2,008 (7.1)	1,378 (5.2)	255 (8.9)	1,123 (4.8)
30-39	767 (8.3)	143 (1.6)	624 (6.8)	2,924 (7.9)	785 (8.8)	2,139 (7.6)	1,695 (6.4)	231 (8.0)	1,464 (6.2)
40-49	1,296 (14.1)	221 (2.4)	1,075 (11.7)	4,946 (13.3)	1,125 (12.6)	3,821 (13.6)	2,853 (10.8)	329 (11.4)	2,524 (10.7)
50-59	1,724 (18.7)	330 (3.6)	1,394 (15.1)	6,177 (16.7)	1,573 (17.6)	4,604 (16.3)	4,715 (17.8)	513 (17.8)	4,202 (17.8)
60-69	1,837 (19.9)	351 (3.8)	1,486 (16.1)	8,267 (22.3)	1,778 (19.9)	6,489 (23.0)	7,048 (26.7)	642 (22.3)	6,406 (27.2)
70세 이상	1,050 (11.4)	199 (2.2)	851 (9.2)	4,757 (12.8)	998 (11.2)	3,759 (13.3)	4,973 (18.8)	433 (15.1)	4,540 (19.3)

2005년

(단위: 명, %)

	양양군		홍성군		남해군				
	읍부	면부	읍부	면부	읍부	면부			
계	9,395 (100.0)	2,159 (23.0)	7,236 (77.0)	29,425 (100.0)	7,575 (25.7)	21,850 (74.3)	21,161 (100.0)	2,355 (11.1)	18,806 (88.9)
10세 미만	533 (5.7)	145 (6.7)	388 (5.4)	1,449 (4.9)	470 (6.2)	979 (4.5)	911 (4.3)	123 (5.2)	788 (4.2)
10-19	875 (9.3)	214 (9.9)	661 (9.1)	2,787 (9.5)	817 (10.8)	1,970 (9.0)	1,503 (7.1)	215 (9.1)	1,288 (6.8)
20-29	836 (8.9)	223 (10.3)	613 (8.5)	1,831 (6.2)	621 (8.2)	1,210 (5.5)	644 (3.0)	119 (5.1)	525 (2.8)
30-39	719 (7.7)	190 (8.8)	529 (7.3)	1,821 (6.2)	595 (7.9)	1,226 (5.6)	1,028 (4.9)	159 (6.8)	869 (4.6)
40-49	1,219 (13.0)	256 (11.9)	963 (13.3)	3,750 (12.7)	1,009 (13.3)	2,741 (12.5)	2,117 (10.0)	293 (12.4)	1,824 (9.7)
50-59	1,577 (16.8)	356 (16.5)	1,221 (16.9)	5,183 (17.6)	1,323 (17.5)	3,860 (17.7)	3,666 (17.3)	428 (18.2)	3,238 (17.2)
60-69	2,314 (24.6)	513 (23.8)	1,801 (24.9)	6,565 (22.3)	1,505 (19.9)	5,060 (23.2)	5,765 (27.2)	557 (23.7)	5,208 (27.7)
70세 이상	1,322 (14.1)	262 (12.1)	1,060 (14.6)	6,039 (20.5)	1,235 (16.3)	4,804 (22.0)	5,527 (26.1)	461 (19.6)	5,066 (26.9)

2010년

(단위: 가구, %)

	양양군		홍성군		남해군				
	읍부	면부	읍부	면부	읍부	면부			
계	7,841 (100.0)	2,024 (25.8)	5,817 (74.2)	28,274 (100.0)	9,235 (32.7)	19,039 (67.3)	17,502 (100.0)	2,321 (13.3)	15,181 (86.7)
10세 미만	321 (4.1)	83 (4.1)	238 (4.1)	1,472 (5.2)	749 (8.1)	723 (3.8)	616 (3.5)	152 (6.5)	464 (3.1)
10-19	622 (7.9)	195 (9.6)	427 (7.3)	2,396 (8.5)	1,107 (12.0)	1,289 (6.8)	1,153 (6.6)	241 (10.4)	912 (6.0)
20-29	442 (5.6)	134 (6.6)	308 (5.3)	1,391 (4.9)	476 (5.2)	915 (4.8)	484 (2.8)	97 (4.2)	387 (2.5)
30-39	526 (6.7)	153 (7.6)	373 (6.4)	1,850 (6.5)	907 (9.8)	943 (5.0)	716 (4.1)	184 (7.9)	532 (3.5)
40-49	904 (11.5)	246 (12.2)	658 (11.3)	3,168 (11.2)	1,306 (14.1)	1,862 (9.8)	1,613 (9.2)	295 (12.7)	1,318 (8.7)
50-59	1,556 (19.8)	377 (18.6)	1,179 (20.3)	5,223 (18.5)	1,589 (17.2)	3,634 (19.1)	2,887 (16.5)	407 (17.5)	2,480 (16.3)
60-69	1,783 (22.7)	455 (22.5)	1,328 (22.8)	5,696 (20.1)	1,555 (16.8)	4,141 (21.8)	4,368 (25.0)	454 (19.6)	3,914 (25.8)
70세 이상	1,687 (21.5)	381 (18.8)	1,306 (22.5)	7,078 (25.0)	1,546 (16.7)	5,532 (29.1)	5,665 (32.4)	491 (21.2)	5,174 (34.1)

참고 문헌

- 권오상, 강혜정. 2008. “농업소득, 농외소득, 농가소득의 절대적 수렴과 상대적 수렴,” 『농업경제연구』, pp.99-117, 한국농업경제학회.
- 김경덕. 1998. 『농업인력의 현황 분석과 중장기 수급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_____. 2003. 『농촌지역의 인구이동: 실태·요인·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_____. 2004. 『농촌·농가인구 및 농업노동력 중장기 전망과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 외. 2011.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권 종합진단지표 개발과 활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필 외. 2004. 『도농간 소득 및 격차의 실태와 원인분석』. 연구보고 R49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Barro, Robert, J. & Xavier Sala-i-Martin. 2004. *Economic Growth*, 2nd ed. The MIT Press, US.
- Becker, G. 1993. *Human Capital*. University of Chicago.
- Kyeong-Duk Kim. 1998. "A Critical Review on Measuring Gender and Human Development."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Vol 24 (Summer) pp.89-114.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Seoul Korea.
- Krugman, Paul. 2007. *The Conscience of Liberal: Reclaiming America from the Right*. Penguin Book, UK.
- Rajan, Raghuram G. 2010. *Fault Lin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US.
- Romer, P.M. 1986. "Increasing Returns and Long-Run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4((October), pp.1002-1037.

연구보고 R653-1

지역 간 · 계층 간 격차실태와 요인분석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1. 11.

발 행 2011. 11.

발행인 이동필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9-1

전화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쇄처 크리커뮤니케이션

전화 02-2273-1775 cree1775@hanmail.net

ISBN 978-89-6013-323-5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